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기재부 담당 기자
발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담당 : 지은 간사 02-723-5052 oversmiler@pspd.org)
제목 [대선논평-11] 안철수 후보의 간이과세 기준 확대 공약 관련 논평
날짜 2012. 10. 30. (총 2 쪽)

2012 대선 논평

안철수 후보의 간이과세 기준 확대, 결국 복지와 경제 둘 다 놓치는 것

부가세·소득세 탈루는 물론 지하경제에서의 비공식 고용 증가시키는 요인 될 것
과세기반 훼손하는 공약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강조하는 안 후보 입장과도 맞지 않아

1. 지난 28일, 안철수 후보가 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를 발표했다. 다섯 가지 과제 중 두 번째는,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다는 것이다. 항상 상식을 강조하던 안철수 후보가 이런 조세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하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역시 간이과세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
2. 참여연대는 그간 간이과세제도 확대 정책에 대해 세원불투명, 과세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조세체계상의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복지국가로 가는 데도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져 세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고용의 증가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 <부표 1>과 <부표 2>에서 보듯이 국제통계연보의 세무조사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규모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모두 7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면,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하기 보다는 정확한 소득과약을 전제로 영세사업자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3. 안철수 캠프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1단계로 SOC 등 비효율적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자연 세수 증가를 도모하고, 2단계로 감세 철회와 비과세 혜택의 축소, 대기업 실효세율 확충 등을 추진하며, 이 두 단계로도 복지예산 충족이 힘들 경우 증세를 하겠다는 구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안 후보는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전망

되는 간이과세제도 확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복지재원의 마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공약인 것이다. 간이과세 대상을 일단 확대하면 이후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당장은 자영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환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끝.

<부표 1>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 (단위: 명, 백만원, %)

	확정 신고인원	조사인원	신고소득금액 (A)	결정소득금액 (B)	소득탈루율 (B-A)/B	부과세액
2005	2,235,905	3,989	-	887,412	-	229,786
2006	2,279,497	4,049	1,240,974	1,862,174	33.4	456,339
2007	2,736,478	4,090	1,182,516	1,964,895	39.8	577,460
2008	3,074,419	3,335	1,824,736	2,388,934	23.6	424,495
2009	3,584,432	3,068	1,018,171	1,629,558	37.5	477,061
2010	3,570,816	3,626	1,366,156	2,063,179	33.7	517,501
1억 이하	-	188	7,888	27,852	71.7	24,204
5억 이하	-	944	72,451	160,511	54.7	61,618
10억 이하	-	885	234,477	338,224	30.7	80,665
50억 이하	-	1,333	522,401	833,545	37.3	230,992
50억 초과	-	274	528,939	703,047	24.8	120,022

자료: 국제청,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

<부표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실적 (단위: 개, 십억원, %)

	가동 법인수	조사법인	신고소득금액 (A)	결정소득금액 (B)	소득탈루율 (B-A)/B	부과세액
2005	341,866	6,343	-	26,010	-	3,016
2006	360,821	5,546	42,038	47,443	11.4	2,799
2007	372,393	4,174	37,179	44,225	15.9	3,936
2008	393,700	2,974	44,049	49,391	10.8	2,659
2009	416,117	3,867	31,394	35,543	11.7	2,074
2010	440,514	4,430	55,633	63,073	11.8	3,550
5억 이하	200,053	122	52	240	78.3	90
10억 이하	53,176	115	28	193	85.5	73
20억 이하	54,588	403	66	144	54.2	47
50억 이하	58,951	861	378	711	46.8	237
100억 이하	26,080	621	669	879	23.9	151
200억 이하	13,582	491	734	1,372	46.5	226
300억 이하	4,419	563	843	1,191	29.2	173
500억 이하	3,439	449	1,145	1,793	36.1	425
1000억 이하	2,596	346	2,904	3,644	20.3	427
5000억 이하	1,972	348	9,222	10,439	11.7	660
5000억 초과	564	111	39,593	42,467	6.8	1,041
대법인	8,571	1,254	52,864	58,343	9.4	2,553
중소법인	410,849	3,176	2,769	4,730	41.5	998

주: 법인규모별 자료는 2009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제청, 『국제통계연보』, 각 연도.